



6.2 지방선거 5대 지역패널조사 1차 조사
盧風과 6.2 지방선거

2010년 5월 15일

서현진 · 유성진
이곤수 · 서상민 · 정원철 · 정한울

제1부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 : 노풍 분석__서현진 · 유성진 · 정한울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선거변수 될까?...서현진(EAI 시민정치패널위원, 성신여대)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이슈보다 여야 결집 효과 커

“MB 대 친노” 구도 현실화될까?...유성진(EAI 선거패널연구팀, 이화여대)
서울, 경기, 경남,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

친노 프레임 부상, 여에 이득인가? 야에 이득인가? 625명 대선패널 분석...정한울(EAI)
반MB 반盧 유권자 향방이 이번 선거의 관건

제2부 제1차 5개 지역패널조사 기초분석__이곤수 · 서상민 · 정원철 · 정한울

1. 5개 지역 투표선호 비교
서울 · 경기 · 전북 오세훈, 김문수, 김완주 우세, 충남 · 경남 혼전 속 안희정, 김두관 1위

2. 요인별 분석
(1) 후보 요인 : 서울 한명숙 도덕성 평가에서 오세훈에 뒤져, 검찰수사 영향인 듯
(2) [경기] 유시민 · 김진표 단일화 효과
(3) 지역별 최우선 현안과제 : 지역복지와 경제 활성화

3. 기본 정치변수 : 국정 지지율, 현직자 평가, 정당 지지율, 경제 평가



1. 6.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 노풍(盧風) 어떻게 불까?

EAI/중앙일보/SBS/한국리서치는 공동으로 서울, 경기,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서 인구비례에 맞게 모집한 600명의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는 첫 번째 조사결과이다. 선거 후까지 총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시간 변화에 따라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난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어느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가이다.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9곳에서 친노무현 인사가 야권후보로 나서자 한나라당은 ‘MB 대 친노’라는 신규정권 대결구도를 만들고 친노심판론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MB 대 반MB’로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며 현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는 민노당 후보와의 단일화 합의 등 수도권 야4당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패널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노풍의 영향력이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현재의 국면을 소위 ‘산 MB와 죽은 노무현’의 대결로 보는 시각은 타당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선거변수 될까?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이슈보다 여야 결집 효과 커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5개 지역에서 실시한 한 1차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6.2 지방선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슈의 경우 이를 투표선택에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무상급식, 4대강, 세종시 등 다른 이슈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4대강, 세종시 등은 정당 지지자들 간 찬반 입장 차이가 분명한 이슈들로서 지지하는 정당별로 이들 이슈를 투표 선택에 고려하겠다는 비율에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노대통령 서거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반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중요한 이슈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노서거 1주기를 중요한 이슈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당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보면, 5개 지역 모두에서 한나라당 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지지자들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지



지자 중에서 14.3%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무려 62.1%가 투표에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경기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자의 22.8%, 민주당 지지자의 56.7%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의 25.3%, 민주당 지지자의 68.5%였다. 충남은 한나라당 지지자의 20.2%, 민주당 지지자의 63.4%였다. 국민참여당 지지층과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 지지층과 유사하게 노 서거 1주기 이슈를 투표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서거 이슈의 경우 실제 투표에서도 다른 이슈들에 비해 보다 여야간 정치적 결집을 강화하는 이슈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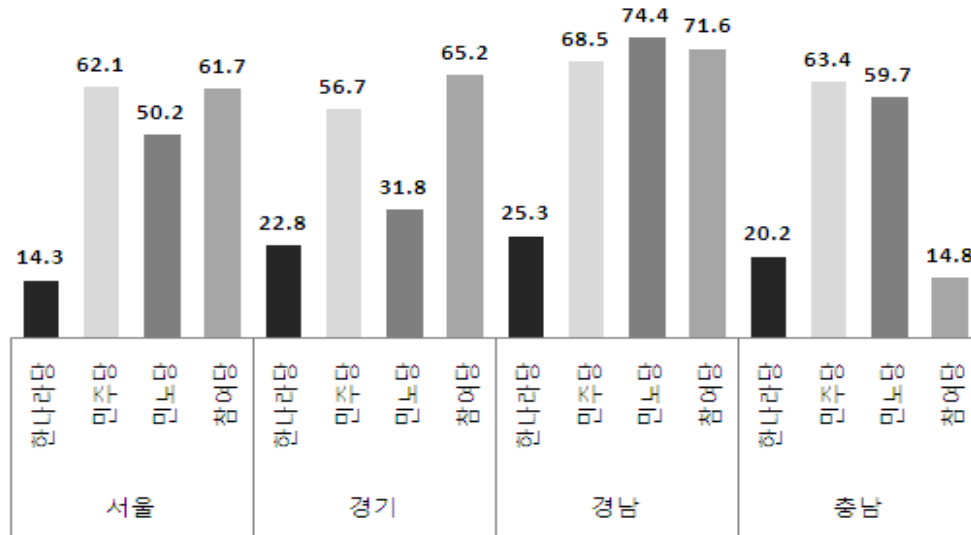
서울만 예를 들더라도 세종시 경우 이를 투표 결정에 고려하겠다는 응답층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40.2%, 한명숙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1.4%로 나타났다. 세종시 문제를 투표선택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층에서는 오 후보 지지가 41.2%, 한명숙 후보 지지는 27.3%로 나타났다. 세종시 문제를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삼는지 여부에 따라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어떤 입장이건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투표할 때 4대강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층에서는 오후보 38.1%, 한명숙 후보 지지가 32.6%였고,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경우 오세훈 후보지지 44.4%, 한명숙 후보지지 23.8%로 나타났다. 투표선택 기준으로 고려할 때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지만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이슈의 경우도 이를 중요한 투표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의 39.6%가 오세훈 후보지지, 31.6%가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 응답층에서는 43.9%가 오세훈 후보지지, 한명숙 후보 지지가 25.2%로 격차가 다소 늘어난다.

반면, 노 서거 1주기 이슈를 투표기준으로 고려하느냐 여부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지지하는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서거 이슈를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고려하겠다는 응답층 중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49.0%는 한명숙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고 19.7%만이 오후보를 찍겠다고 했다. 노 서거 이슈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 들에게서는 반대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무려 51.9%, 한명숙 후보 지지는 19.5%로 급감하고 있다. 즉 노서거 이슈를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후보가 상반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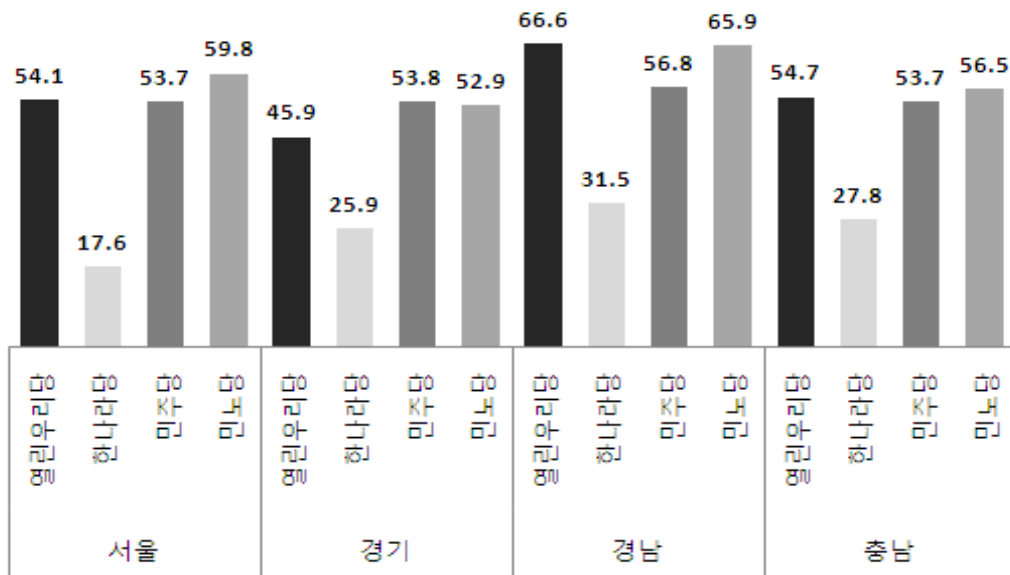
결국 노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이슈는 투표선택기준으로 삼을지 여부와 실제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는 데 다른 어떤 현안보다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투표선택에서 노 전대통령 관련 이슈를 고려하는 응답자는 한명숙 후보를, 그렇지 않을 경우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해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통령 서거 1주기를 기점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지지자들의 슬픔이나 분노가 정치권의 대결구도 전략인 한나라당 대 '친노' 또는 '반MB'라는 연대 형성으로 표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예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노대통령 서거이슈가 친노 지지층의 결집으로 귀결될지, 반 MB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중요 변수가 될 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림1] 현 정당 지지별 “노 전대통령 1주기”의 투표 시 “고려 하겠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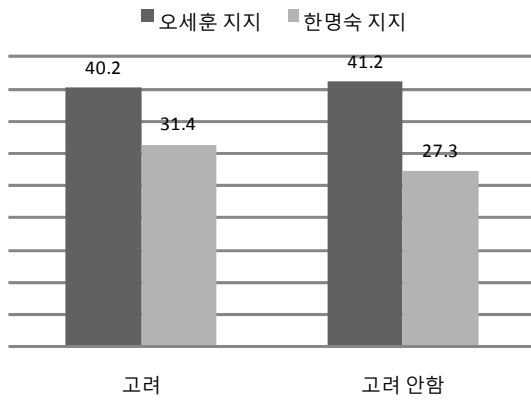


[그림2] 2006년 지방선거 투표정당별 “노 전대통령 1주기”의 투표 시 “고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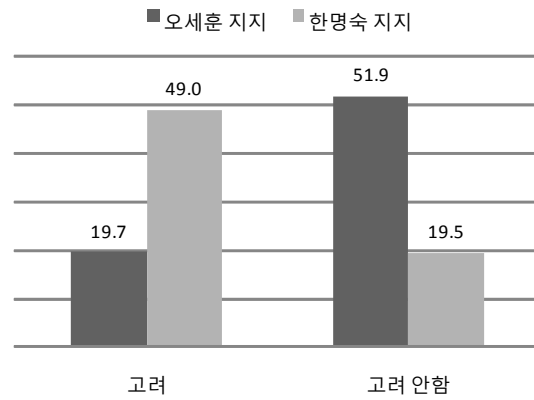


[그림3] 주요 이슈 고려 여부에 따른 여야 지지편차: 서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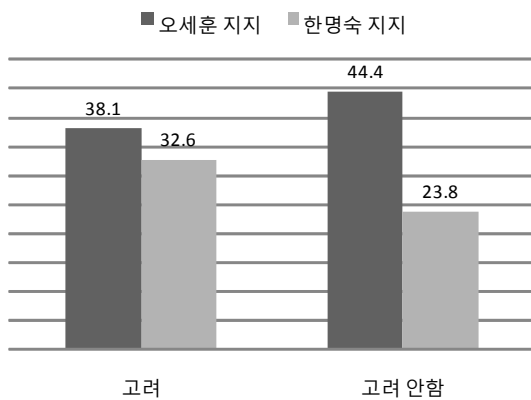
세종시 이슈 고려여부에 따른 투표선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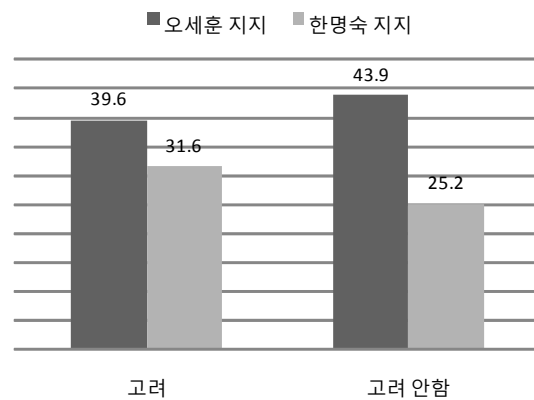
노 서거 고려여부에 따른 투표선택 차이



4대강 고려 여부와 투표 선택



무상급식 고려 여부와 투표선택



“MB 대 친노” 구도 현실화될까?

“MB 대 친노” 대결인가, “MB 대 反MB” 대결인가?

서울, 경기, 경남,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

유성진(이화여대 BK21)

6.2 지방선거 후보자가 확정되고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열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지난 참여정부의 주축 인물들이 대거 등장, 현 정부의 인물들과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명숙 후보, 경기 유시민 후보, 경남 김두관 후보 등은 지난 참여정부의 대표적 인물들로 각 지역에서 현 정부의 주축인물들인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각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부 대 지난 참여정부 혹은 MB 대 친노세력 간의 대결로 규정지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자칫 왜곡된 규정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었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을 참여정부의 핵심지지층이라고 본다면, 이들로부터 서울의 한명숙 후보는 58.8%의 지지를, 유시민, 안희정, 김두관 후보는 각각 45.1%, 40.6%, 53.8%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이번 선거에서 친노세력의 결집이 어느 정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선거 자체를 MB 대 친노세력 간의 대결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님을 알려준다.

오히려 참여정부 인사들의 지지자들은 친노세력이 주축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범야권세력, 그리고 무당파에 걸쳐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각 후보자들의 지지자들의 정당지지 분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한명숙 후보의 지지자의 경우 가장 많은 48.3%가 민주당 지지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무당파 지지자가 30.3%, 민주노동당 지지자는 5.6%, 한나라당 지지자도 5.6%를 차지하고 있다. 친노정당을 표방한 국민참여당 지지자들은 한명숙 지지층의 3.9%에 불과하다. 유시민 후보의 지지층 역시 민주당 지지자 46.0%, 무당파 24.4%, 국민참여당 지지층이 8.5%, 민주노동당 지지자 7.4%로 구성된다. 충남의 안희정 후보의 경우도 전체 지지자의 62.1%가 민주당 지지자였고, 무당파 층은 13.6%에 달한다. 경남의 김두관 후보 지지층은 다소 특색이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이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 18.2%,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도 15.6%나 된다는 점이다. 그 뒤를 이어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14.3% 정도다.

이와 같은 지지율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지지세력이 범야권세력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번 지방선거의 대결구도가 지난 참여정부가 아닌 현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 반대여부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아직 선거 초반이고 각 지역에서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24~45.3%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



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아직까지 이번 선거를 MB 대 친노세력 간의 대결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표1] 친노성향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자의 정당지지 구성(%)

	한명숙	유시민	안희정	김두관
한나라당	5.6	6.8	4.3	15.6
민주당	48.3	46.0	62.1	18.2
자유선진당	1.1	0.6	7.9	1.9
민주노동당	5.6	7.4	5.7	14.3
창조한국당	1.1	1.7		0.6
진보신당	3.4	3.4	2.9	3.9
국민참여당	3.9	8.5	2.1	9.7
기타	0.6	1.1	-	-
지지 정당 없음	30.3	24.4	13.6	32.5
모름/ 무응답	-	-	1.4	3.2
계	100	100	100	100



6.2 지방선거 선거구도 분석

친노 프레임 부상, 여에 이득인가? 야에 이득인가? 625명 대선패널 분석

반MB 반盧 유권자 향방이 이번 선거의 관건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유시민 전 장관이 제1야당 민주당 김진표 후보를 누르고 야권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결정되었다. 서울 한명숙, 경남 김두관, 충남 안희정 등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의 상당수가 과거 친노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여야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5.23 노 전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노풍’이 선거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충남, 호남을 제외하고 한나라당이 여유있게 앞서가던 판세가 변화하면서 소위 MB냐 노무현이냐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선거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EAI/중앙일보/SBS/한국리서치가 지난 대선부터 실시해온 패널조사를 통해 현재 유권자들의 인식 유형을 분류해보면 MB 대 친노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현정부에 대한 태도와 전 정부에 대한 태도를 교차해보면 MB정부에 긍정적인면서 노전정부에 부정적인 ‘친MB반노’와 현 정부에 부정적이면서 친노적 성향의 ‘반MB친노’ 여론과 함께 두 정부 모두에 비판적인 ‘반MB반노’ 여론 및 두 정부 모두에 긍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친MB친노’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정부 심판론이 확산되었던 2007년 대선 직후 실시한 패널조사부터 이번 조사까지 참여한 621명 중 현재 MB정부에 부정적인 반MB 여론이 51.4%, 부정적인 여론은 48.6%로 팽팽하다. 2년 전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응답은 전체 621명 150명으로 24.2%에 그쳤다. 반면 당시 노 대통령 국정에 비판적인 응답은 471명으로 무려 75.8%에 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에서 부정적이면서 현 정부에 긍정적인 응답층은 전체 674명 중 274명으로 44.1%로 가장 많다. 반면 현 MB 정부에 부정적이면서 참여정부에 긍정적인 ‘친노반MB’ 성향의 응답자는 총 10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6.9%에 불과하다. MB 대 친노의 대결구도로 갈 때 여당이 유리할 수 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현재 MB 정부의 국정에 불만을 가지면서 2007년 당시 노전대통령에도 부정적이었던 ‘반MB반노’ 여론이 총 19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1.7%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MB에도 비판적이지만 과거 친노진영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지사 단일화과정에서 김진표 지지자의 상당부분이 유시민 지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김 후보 지지층의 상당부분이 이들 ‘반MB반노’ 성향의 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 정부 모두에 긍정적인 응답자는 45명으로 전체 7.2%에 불과했다.

‘반MB반노’ 성향의 유권자들과 ‘반MB친노’ 성향의 유권자들이 ‘반MB’로 결집할 경우 이번 선



거는 'MB 대 반MB' 프레임이 작동하게 되어 정권견제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들이 '친MB반노'와 연결되면 즉 전임정부 심판론을 매개로 친MB반노와 반MB친노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게 될 경우 2006년과 같은 표출림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한 현 정부와 이전 정부 모두에 비판적인 여론이 'MB 대 친노'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다면 해도 현재 40%가 넘는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 쪽이 유리하게 선거정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산법에 의해 '반MB 연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친노 대 MB'의 구도로 끌고 가려는 한나라당과 'MB 대 반MB 연합'을 내세운 민주당 간의 충돌이 선거 초기 국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보여지는 '친노마케팅'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은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이라는 역풍과 함께 '반MB반노' 그룹의 친노 거부감을 자극함으로써 반MB 연대를 스스로 약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정부와 여당은 50%를 넘나드는 국정지지율에 취해 일방적 독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당 분열로 이어질 정도로 골이 깊은 '반MB반노' 진영과 '반MB친노' 진영의 연대를 촉진시켜 스스로 '정권견제론'의 촉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1] 전·현직 정부 심판론 교차로 본 선거프레임과 유권자 분포 : (%)

		MB 국정평가 (2010.5)-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MB 대 반MB 프레임 (MB 심판론)		
		반MB	MB 지지	
노 국정평가 2007.12 2007 대선패널 조사	친노 대 반노 프레임	親노 反MB 105명 친노의 70.0% 반MB의 34.8% 전체 유권자의 16.9%	親노 親MB 45명 친노의 30.0% 14.1 전체 유권자의 7.2%	친노 합계 150명 (24.2%)
	盧심판론	反노 反MB 어디로? 197명 반노의 41.8% 반MB의 65.2% 전체 유권자의 31.7%	반노 친MB 274명 반노의 58.2% 친MB의 85.9% 전체유권자의 44.1%	반노 합계 471명 (75.8%)
		반MB 302명 (48.6%)	친MB 319명(51.4%)	총 621명



Ⅱ. 제1차 5개 지역패널조사 세밀분석

이곤수(거버넌스센터) · 서상민(중국연구센터) · 정원철 · 정한울(여론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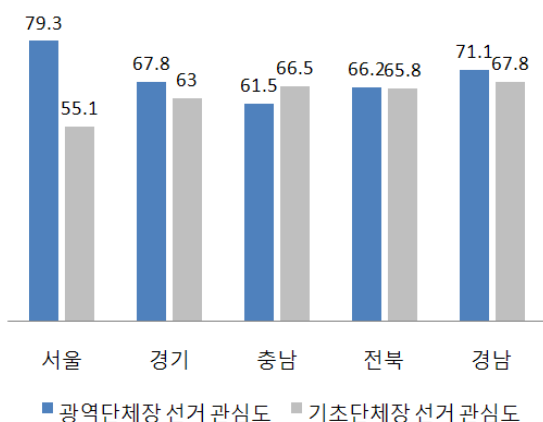
1. 5개 지역 투표선호 비교

격전지 광역단체장 선거 관심 높아, 지방에서는 기초단체장 관심도 높아
지방의회 및 교육감선거 관심도는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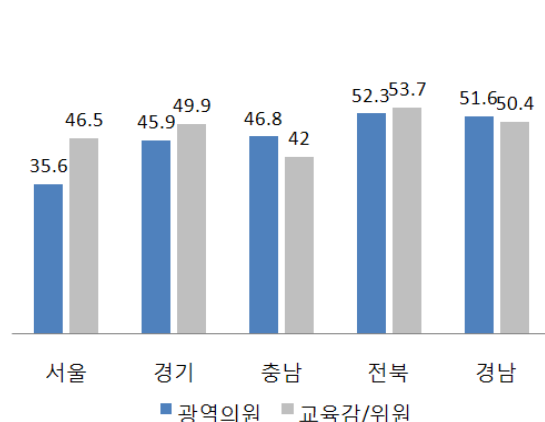
6.2지방선거 후보자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시장 선거의 경우 조사 대상 5개 지역의 평균 관심도인 69.2%를 10%이상이나 상회하는 79.3%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 이어 현 정권과 전 정권의 행정자치부장관 출신 후보자 간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친노 그룹의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맞선 경남 지역의 선거관심도 역시 71.1%로서 다른 지역에서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유권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충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앞선 두 지역에 비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 선거관심도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교육감/위원



5대 지역 후보 지지율 분석

패널조사의 경우 동일집단의 투표변동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장점을 가진 방법론으로서 지지율 등 특정시점의 여론을 추정(estimation)하는 데는 일반 일회성 조사(ad hoc)가 보다 적절한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번 5대 지역 1차 패널조사의 경우 첫 조사이기 때문에 반복된 조사과정에서 응답자 일부가 탈락하는 패널손실문제, 응답자가 정치적으로 각성되는 패널오염효과 등이 없어 일회성 조사에 비교해 근본적인 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패널조사의 특성은 고려하여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패널조사 경험을 보면 심지어 반복조사 과정에서도 EAI 패널조사 결과는 ‘투표참여’와 ‘투표 관심도’ 문항을 제외한 투표 지지 및 대다수 문항에서 일회성 조사 못지 않은 정확한 예측력을 보여준바 있다.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1, 2』)

□ 오세훈 vs 한명숙 지지율 10.4% P 差, 적극적 투표의사층 9.8%P 差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29.8%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의 40.2%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초반 15~20%까지 벌어졌던 양 후보가 지지율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한 자리수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적극적 투표의향층에서는 한명숙 후보는 33.7%를 얻어 오세훈 후보 43.5%를 9.8% 차이로 좁히고 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TV토론 회피로 지지율 상승의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던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회복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이미 상한가를 쳐 더 이상 상승요인이 없는 반면 선거열기가 가열되면서 하한가에서 시작된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할 요인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 5개 지역 중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평균 34.5%보다 낮은 24%를 차지하고 있다 점이 상승 폭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경남에서 이번 발생하나? 김두관 25.7%, 이달곤 23.4% 오차범위 내 혼전

서울지역 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경남이다. 경남은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친노 그룹의 김두관 후보가 청와대 낙하산 공천으로 논란이 되었던 한나라당의 이달곤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무소속의 야권단일 후보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은 25.7%로 이달곤 후보 23.4%를 오차범위 내인 2.3% 앞서가고 있다. 적극적 투표의향층의 지지율에서 격차는 3.9%로 더 벌어지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는 30.2%를 이달곤 후보는 26.3%를 얻었다.

지역별로 보면 밀양/창녕/창원/마산/의견/함안에서 이달곤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반면, 김두관 후보는 김해/양산/진해에서 비교적 큰 격차로 앞서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물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3%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고, 더욱이 적극적인 투표의사를 밝힌 유권자 중에서조차도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유권자가 39.2%나 된 만큼 부동산 표가 어디로 쏠리느냐가 경남지역 선거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표를 확보하기 위한 양 후보간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것이다.

▣ **충남지역 친노 386이 선전하고 있다. 안희정 23.3%, 박상돈 17.3%, 박해춘 11.7%**

세종시 논란의 중심인 충남지역의 선거가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노무현 정권의 386 그룹 핵심이었던 안희정 후보가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후보, 한나라당의 박해춘 후보를 각각 6%P와 11.6%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원안 사수의 적임자를 두고 벌이는 안희정 후보와 박상돈 후보와의 양강 구도 속에 충남발전을 위한 경제인 출신 후보를 내세우고 뒤늦게 도전장을 던진 박해춘 후보 간 3자 대결은 부동산표 41.1%를 두고 혼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후보개인이나 정책 및 공약 보다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비율이 41.3%로 높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의 충남지역 정당지지를 보면 한나라당은 20.1%, 민주당은 24.6%, 자유선진당은 20.0%로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 반면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의 비율이 24.9%로 지지정당이 있는 유권자보다 많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 중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67.8%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당파 지지후보 미결정 유권자들의 표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텃밭에서 고전하는 ‘미쇠고기 파동’의 주역, 김완주 50.5%, 정운천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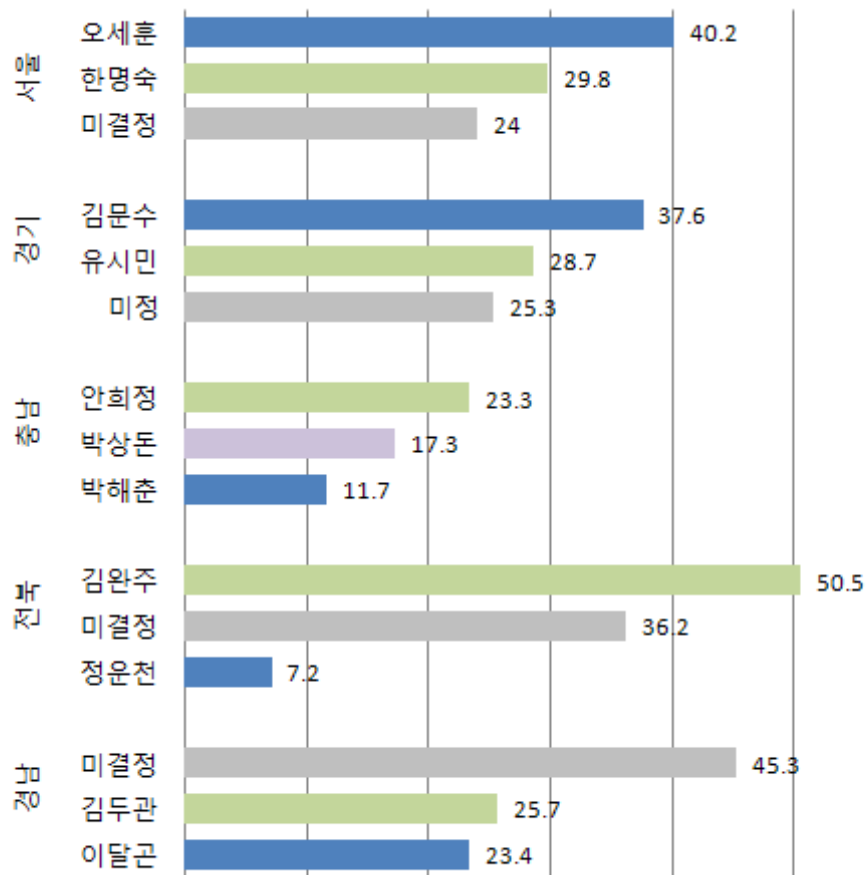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으로 사퇴한 정운천 후보가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의 고향이기도 한 전북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의 김완주 후보는 50.5%, 정운천 후보는 7.2%의 지지율을 얻었다. 김완주 후보의 경우 전북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지역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현직자 효과(incumbent effect)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후보의 경우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적임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민주당 지지기반인 전북에서 아직 의미 있는 표심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 **경기 야당 후보단일화 김문수 벽 넘을 수 있을까? 단일화 시 김문수 37.6%, 유시민 28.7%**

5월 13일 야당 경선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시민을 후보로 확정하였다. 야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보단일화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와 참여당의 유시민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38.4%로 김진표와 유시민의 야당 두 후보 지지율을 합한 30.1%를 8.3%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도 경기북부와 남부 전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야당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당과 야당 후보간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 후보 단일화가 야당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지 역시 관심 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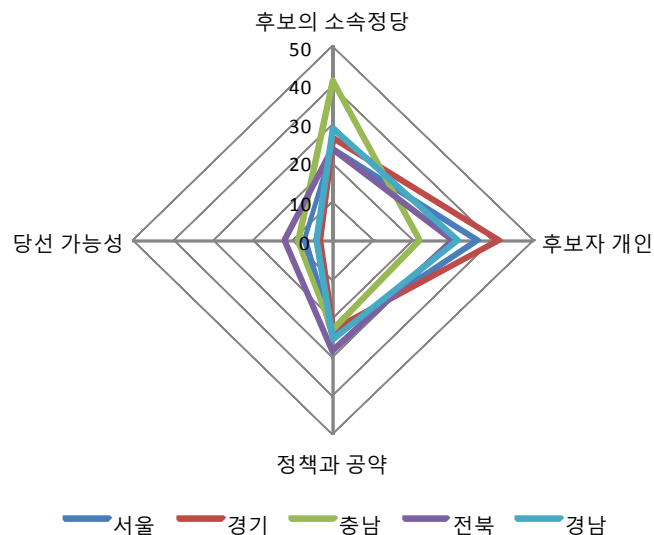
[그림2] 5대 지역 투표선호



투표결정요인 수도권/전북은 후보자 요인, 충남지역은 소속정당 우선

무엇을 보고 지지후보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서울/경기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제일 먼저 꼽았다. 서울지역 유권자의 36.2%, 경기지역 유권자의 41.2%는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후보자개인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충남지역 유권자의 41.3%는 후보나 정책보다는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정책과 공약의 우열을 가리는 선거이기 보다는 후보와 정당에 의해 투표가 결정되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5대 지역 지지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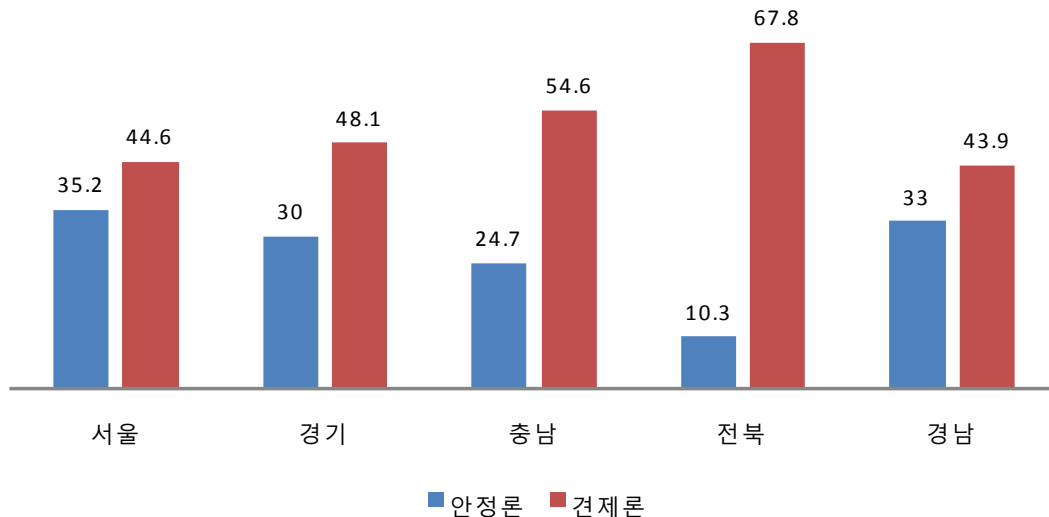
	후보의 소속정당	후보자 개인	정책과 공약	당선 가능성
서울	23.9	36.2	24.7	7.1
경기	26.5	41.6	22.9	3.6
충남	41.3	21.5	23	8.9
전북	23.8	29.9	28.3	12.1
경남	29.1	31.3	25.4	4.4

6.2 지방선거, 견제론 팽배

이번 조사대상 5대 지역 유권자들은 “한나당과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절반이상인 67.8%와 54.6%가 견제론에 공감하고 있고, 다른 세 지역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견제론이 우

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에 공감한 유권자는 서울과 경남지역에서 35.2%와 33%로 다소 높게 나왔지만 견제론에 공감하는 유권자보다는 수가 적었다.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지방선거를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림4] 5대 지역별 안정론 대 견제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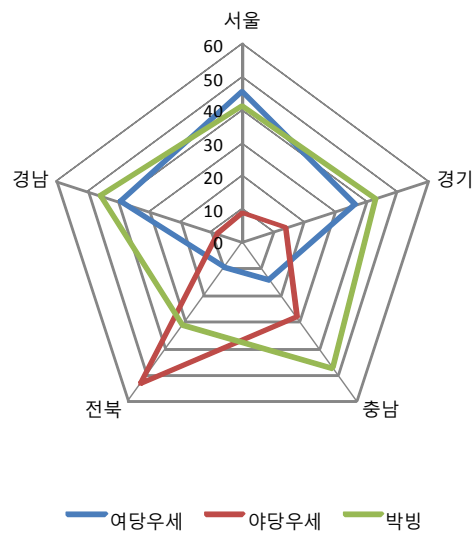
6.2 지방선거 판세, 아직 모른다

전북 제외 4개 지역 박빙 예상

서울/경기/경남은 여당 우세, 충남/전북은 야당 상대적 우세 전망 높아

이번 조사대상 5대 지역 중 전북을 제외한 네 개 지역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고 유권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여당과 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남과 충남 지역에서는 물론 한나라당 후보가 크게 앞서가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조차도 유권자들은 예측이 힘든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고 있다. 서울지역 유권자 중 여당후보가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유권자는 45.8%로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41.5%에 불과 4.3% 많으며, 경기지역의 경우 지지율 격차가 서울보다 크지만 판세는 오히려 누가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 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43.0%로 여당후보의 우세라고 예상하는 유권자 36.5%보다는 16.5%가 많다. 현재 접전중인 충남과 경남지역의 유권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7.2%와 45.7%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아직 선거운동 초반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얼마든지 여야 후보의 지지율 변동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5] 지역별 선거판세 전망



	여당우세	야당우세	박빙
서울	45.8	8.7	41.5
경기	36.5	14	43
충남	14	28.4	47.2
전북	9.4	53.4	31.2
경남	39.2	7.8	45.7

2. 요인별 분석

(1) 후보 요인 : 서울 한명숙 도덕성 평가에서 오세훈에 뒤져, 검찰수사 영향인 듯

한나라당 후보 보수, 민주당 후보 진보: 전북 김완주 후보는 보수로 인식

오세훈, 김문수, 김완주 : 도덕성과 시/도정 능력 모두 우위, 한명숙 도덕성에서도 뒤져

조사결과를 보면 앞서가는 후보들은 상대후보에 비해 도덕성이나 시/도정 운영능력 평가에서 모두 앞서가고 있다. 서울의 오세훈 후보, 경기의 김문수 후보, 전북의 김완주 후보는 도덕성과 능력평가에서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다. 서울에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의 경우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정능력평가에서도 뒤졌다.

한명숙 후보의 경우 과거 열린우리당의 주요 정치인 중 상대적으로 유권자로부터 신뢰도가 높은 후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뇌물사건의 무죄판결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타격이 있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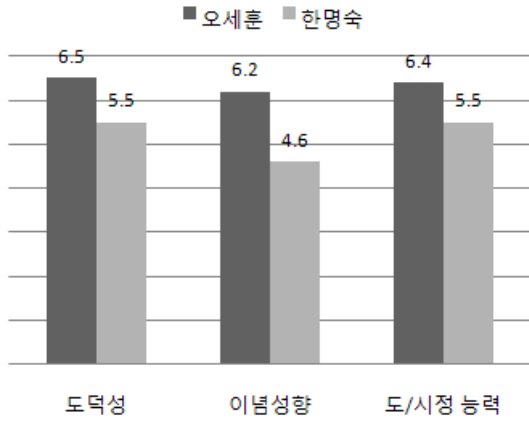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남의 경우 대체로 두 전직 행정부 장관들이 맞붙은 지역 답게 도정능력평가에서는 이달곤 후보 6.0점, 김두관 후보 5.9점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반면, 도덕성 평가에서 김두관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다. 충청에서는 안희정 후보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와 도덕성과 도정능력 평가에서 선두를 다투고 한나라당 박해천 후보가 뒤쫓는 형국이다.

이념성향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보수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진보적으로 평가하면서 후보간 이념성향의 격차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전북의 경우 정운천 후보에 대해 5.7점, 김완주 후보에 대해 5.6점을 주어 모두 중도 보수성향의 후보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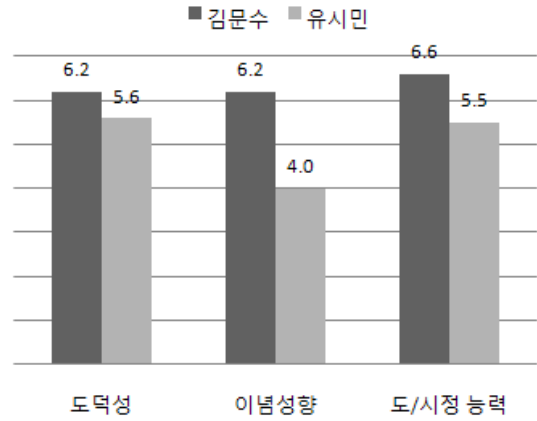


[그림6] 5대 지역 후보별 평가: 도덕성, 이념, 시/도정 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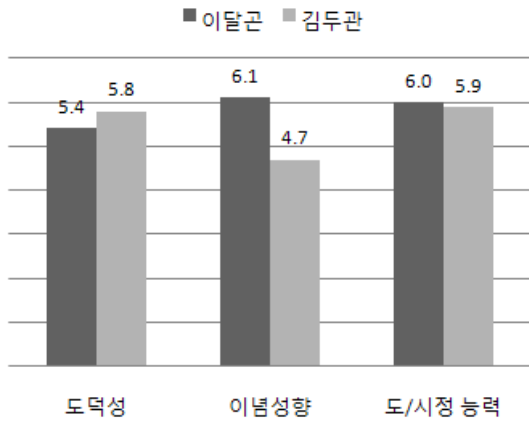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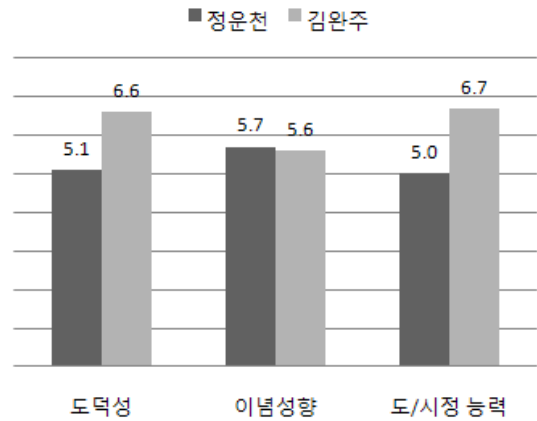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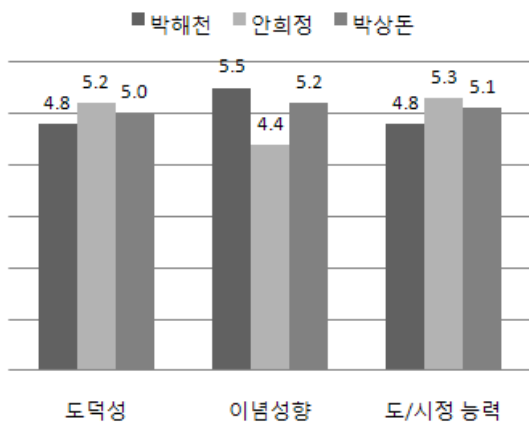
경남



전북



충남



* 이념성향

0(매우 진보)~5점(중도)~10점(매우 보수) 척도로 측정. 5를 기준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진보, 클수록 강한 보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 도덕성, 시/도정 능력 평가

0(매우 부족)~5점(중간)~10점(매우 충분). 높을수록 좋은 평가



(2) [경기] 유시민 · 김진표 단일화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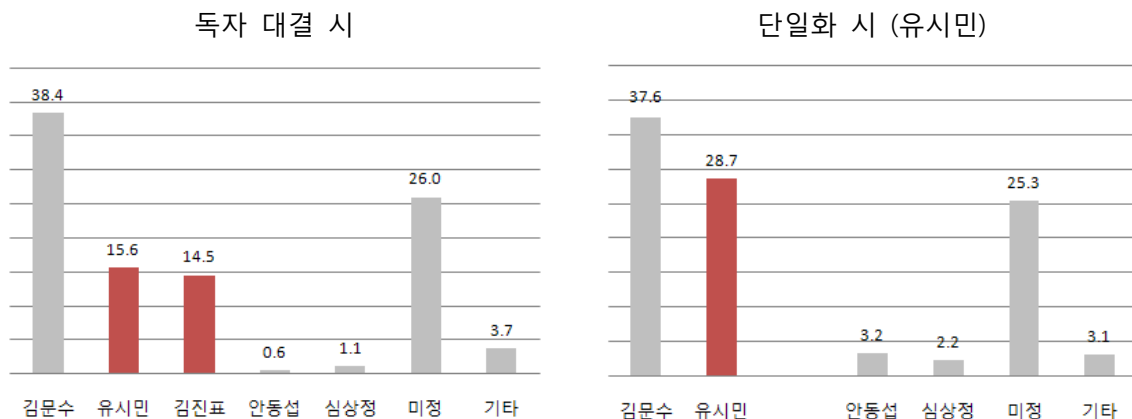
단일화 전 김문수 38.4% > 유시민 15.6% > 김진표 14.5%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 시 김문수 37.6% > 유시민 28.7%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는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야권후보 단일화의 파괴력이 어느정도일지에 집중된다. 특히 13일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표의 이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38.4%,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15.6%, 민주당 김진표 후보 14.5%, 심상정 후보 1.1%, 안동섭 후보 0.6% 순이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부동층이 26.0%였다.

그러나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 누굴 찍겠는가’라고 물어 본 결과 김문수 후보는 37.6%로 비슷했고, 단일후보 유시민 후보가 28.7%로 10%포인트 차로 추격하는 양상이다. 안동섭 후보 3.2%, 심상정 후보 2.2% 순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5.3%였다.

[그림7] 단일화 전후 경기지사 지지율 변화 (경기도 600명 조사)



단일화의 “+α” 효과는 미지수

김진표 후보 지지자(87명)의 48.5%(42명) 만 유시민 지지로 이어져

단일화로 부동층 156명의 19.2%(30명) 유시민 지지층으로 흡수%, 8.6%(13명) 흡수한 김 후보보다 이익

단일화 전후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면 단일화 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8.7%로 유시민, 김진표 후보가 모두 출마시 유시민 후보 지지 15.6%, 김진표 후보 지지 14.5%를 합한 30.1%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이다.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변화가능성은 있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진 현재까지는 소위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단일화 이전 단일화를 가정하고 진행한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단일화 효과를 체험한 상태에서의 여론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표이 이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김진표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이 적지 않다. 두후보가 독자 출마했을 경우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87명 중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48.5%(42명)에 불과하다. 42명의 새로운 지지층이 확대되었지만 45명은 이탈하는 셈이다. 김진표 후보 지지자 중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지지선택을 유보한 비율이 21.2%(18명)였고 심지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12.6%(11명)이나 되었다.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 지지로 돌아선 비율이 11명으로 12.6%, 심상정 후보 지지로 돌아선 사람은 4명으로 4.2%였다. 김진표 후보 지지층의 유시민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독자 출마시 부동층이었던 156명 중 19.2% 수준인 30명이 유시민 후보로 돌아섰다. 단일화로 투표선택을 하지 못한 부동층의 다섯 명 중 한명을 유시민 후보 지지로 돌린 셈인데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격차를 크게 좁히는 힘으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그 외에 단일화 하지 않을 경우 김문수 후보 지지자(230명) 중 6명, 안동섭(4명), 심상정 후보 지지층(7명)으로부터 각 1명, 기권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층(22명)으로부터 4명이 새로 유시민 지지를 밝혔다. 다만 단일화 이전에는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서던 김문수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좁히게 됨에 따라 최소한 추격의 발판은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표1] 단일화 전후 주요 후보 지지 변동

독자 출마 시		단일화 할 경우	
김문수 지지자 230명 (전체 38.4%)	→	김문수 지지	200명 86.9%
	→	유시민 지지	6명 2.8%
	→	안동섭 지지	0명 0.0%
	→	심상정 지지	1명 0.4%
	→	결정 못함	19명 8.3%
	→	투표 안함/기타	4명 1.6%
김진표 지지자 87명 (전체 14.5%)	→	김문수 지지	11명 12.6%
	→	유시민 지지	42명 48.5%
	→	안동섭 지지	11명 12.6%
	→	심상정 지지	4명 4.2%
	→	결정 못함	18명 21.2%
	→	투표 안함/기타	1명 1.1%
부동층(미정) 156명 (전체 34.5%)	→	김문수 지지	13명 8.6%
	→	유시민 지지	30명 19.2%
	→	안동섭 지지	3명 1.8%
	→	심상정 지지	2명 1.3%
	→	결정 못함	104명 66.6%
	→	투표 안함/기타	4명 1.5%

[표2] 단일화 전후 전체 표의 변동

표의 이동 ⇒		유시민 단일후보 시 투표 선호							
단일화 전		김문수	안동섭	심상정	유시민	미정	기권	모름	합계
김문수	빈도	200	0	1	6	19	2	2	230 (38.4%)
	(%)	(86.9)	(0.0)	(0.4)	(2.8)	(8.3)	(0.9)	(0.7)	100
김진표	빈도	11	11	4	42	18	1	0	87 (14.5%)
	(%)	(12.8)	(12.3)	(4.2)	(48.5)	(21.2)	(1.1)	(0.0)	100
안동섭	빈도	0	3	0	1	0	0	0	4 (0.6%)
	(%)	(0.0)	(75.8)	(0.0)	(24.2)	(0.0)	(0.0)	(0.0)	100
심상정	빈도	0	0	4	1	2	0	0	7 (1.1%)
	(%)	(0.0)	(0.0)	(56.8)	(14.8)	(28.4)	(0.0)	(0.0)	100
유시민	빈도	0	1	3	87	2	0	1	94 (15.6%)
	(%)	(0.0)	(0.8)	(3.0)	(93.1)	(2.1)	(0.0)	(1.0)	100
미정	빈도	13	3	2	30	104	2	2	156
	(%)	(8.6)	(1.8)	(1.3)	(19.2)	(66.6)	(1.2)	(1.3)	100
기권	빈도	1	1	0	2	5	9	0	18 (3.0%)
	(%)	(4.6)	(5.6)	(0.0)	(12.2)	(29.4)	(48.2)	(0.0)	100
모름	빈도	0	1	0	2	2	0	0	4 (0.7%)
	(%)	(0.0)	(21.7)	(0.0)	(43.9)	(34.4)	(0.0)	(0.0)	100
합계	빈도	225	19	13	172	152	14	5	600
	(%)	(37.6)	(3.2)	(2.2)	(28.7)	(25.3)	(2.3)	(0.8)	100



(3) 지역별 6.2 지방선거 쟁점과 이슈

지방선거 중점 최대 아젠다 : 민생/복지 VS. 지역개발/지역 활성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에 대해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선호하는 입장과 지역복지 및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5개 지역별 조사결과(응답자 수 각 600명)를 모두 합쳐 평균을 낸 결과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복지 확대방안”이 32.4% 그리고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방안”이 31.1%로 백중세였다. ‘복지’와 ‘지역경제’가 6.2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 밖에 부패해소와 지방정치 개혁방안을 꼽은 응답비율이 13.8%였다. “교육개혁 및 교육기반 확대방안”은 6.6%였으며 “행정통합 등 지역행정 개혁방안”이 5.8%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과 문화 측면에 대한 중요성은 지방선거에서 큰 힘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에서 “환경 및 지역문화 기반 발전 방안”이 차지한 응답비율은 5.6%에 머물렀다.

이번에 조사한 5개 지역 모두에서 민생안정과 복지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응답과 개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우선하는 응답비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에서 “민생안정과 지역복지 확대방안”을 꼽은 응답이 34.9%, 지역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26.7%로 8.2% 포인트, 경기도에서 민생/복지를 꼽은 응답이 35.1%, 지역개발/활성화를 꼽은 응답이 30.1%로 5.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전북에서는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꼽은 응답이 34.0%로 민생과 복지를 선택한 응답 29.0%보다 5.0%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충남과 경남지역에서는 각각에 대한 응답비율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3] 5개 지역별 지방선거 중점 현안(%)

	지역개발 과 경제 활성화 방안	부패해소 와 지방정치 개혁방안	행정통합 등 지역행정 개혁방안	민생안정 과 지역 복지확대 방안	환경 및 지역문화 기반 발전방안	교육개혁 및 교육기반 확대방안	기타	잘 모름/ 무응답
전체	31.1	13.8	5.8	32.4	5.6	6.6	2.4	2.3
서울	26.7	16.7	4.8	34.9	6.4	7.8	1.6	1.0
경기	30.1	13.5	5.4	35.1	3.9	8.9	1.6	1.5
충남	31.3	13.7	6.4	29.8	6.9	4.9	4.4	2.6
전북	34.0	15.2	4.1	29.0	6.5	6.0	2.2	2.9
경남	33.2	10.0	8.2	33.3	4.2	5.1	2.3	3.6

투표 시 최대 고려 이슈는 초중교생 무상급식·4대강 사업·세종시 사업 순 천안함, 전교조, 노서거 1주기 등 정치안보 이슈보다 민생 및 지역경제 이슈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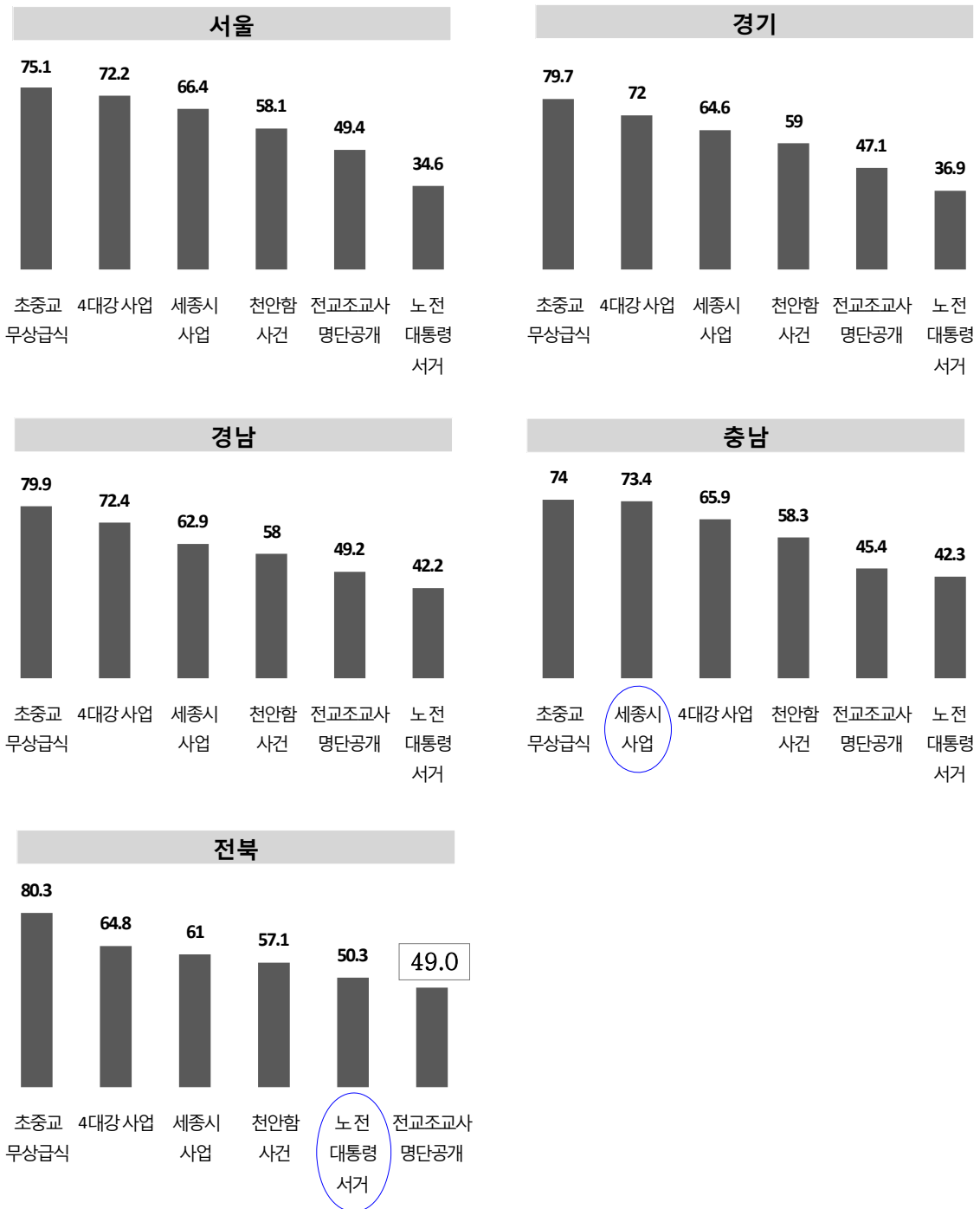
5개 지역별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고려 정도를 물어보았다. 모든 지역에서 무상급식·4대강 사업·세종시 사업 문제가 최대 이슈로 인식되고 있었고 천안함 사건·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순으로 “고려 하겠다”는 응답비율들이 높게 나타났다.

초중 무상급식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5개 전 지역에서 70%(전북 80.3%, 경남 79.9%, 경기 79.7%, 서울 75.1%, 충남 74.0%)를 넘어서 이번 선거 최대 현안임으로 입증했다. 4대강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전북, 충남에서만 각각 65.9%, 64.8%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다른 지역에서는 72.0% 정도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그 뒤에 세종시 이슈가 위치한다. 경기 64.6%, 서울에서 66.4%, 경남 62.9%, 전북 61.0%였다. 다만 충남에서는 세종시 이슈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73.4%로 무상급식을 꼽은 응답 74.0%와 선두를 다투면서 충남도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충남 58.3%, 서울 58.1%, 경기 58.0%, 경남 58.0%, 전북 57.1%였고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문제를 꼽은 응답은 서울 49.4%, 전북 49.0%, 경남 49.2%, 경기 47.1%, 충남 45.4%로 지역별로 비슷했다. 마지막으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문제의 경우 전북에서 노전대통령 서거 추모를 꼽은 응답이 50.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고 순위로도 전교조교사 명단 공개 문제(49.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충남 42.3%, 경남 42.2%, 경기 36.9%, 서울 34.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 노전대통령 서거와 같은 정치안보 이슈보다 생활, 지역경제에 보다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구체적 이슈들 무상급식, 4대강, 세종시 이슈들을 투표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8] 5개 지역별 주요 이슈에 대한 지방선거 고려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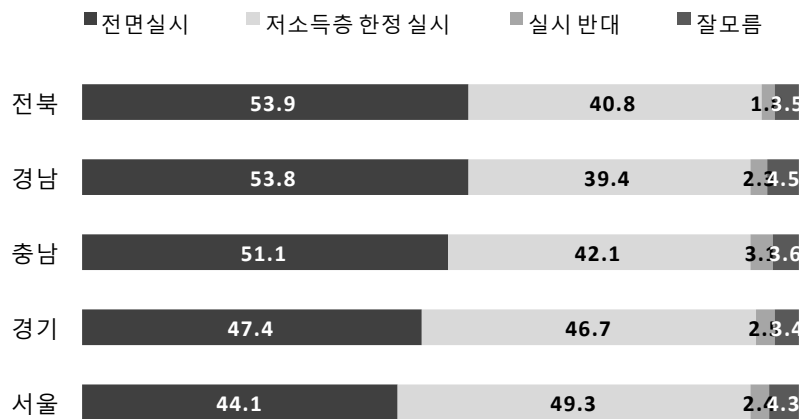


3대 이슈에 대한 지역별 여론 분포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대 선별 실시 : 수도권에선 팽팽, 지방에선 전면 실시 우세
30~40대 이해당사자 전면 실시 선호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핵심 이슈인 초중교생의 무상급식, 세종시 사업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별 유권자들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우선 초중교생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전면 실시)의 응답비율이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하여 실시해야 한다(선별 실시)보다 일부 높게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은 1~3%대에 머물렀다.

[그림9] 초중교생 무상급식에 대한 5개 지역별 입장차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로 초중교생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 전면 실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이들 연령대에서 초중교생 자녀를 둔 경우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 이해당사자들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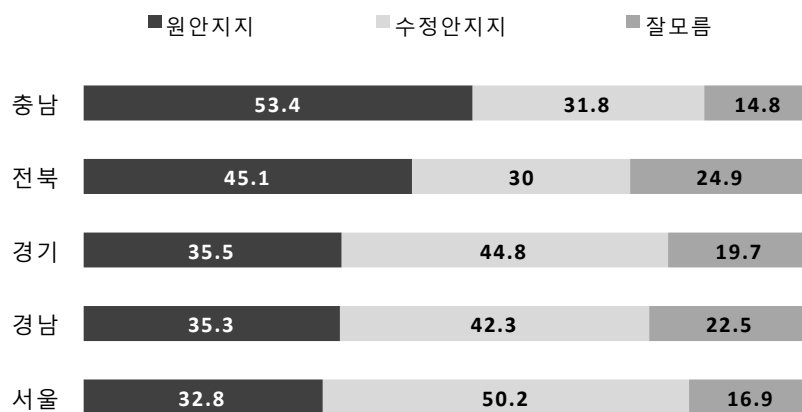
[표4] 초중교생 무상급식에 대한 5개 지역 연령대별 “전면 실시” 응답비율(%)

	서울	경기	경남	충남	전북
19~29세	45.0	35.4	51.6	57.6	49.7
30대	63.7	67.9	69.6	71.8	72.2
40대	51.7	55.6	58.9	55.0	64.2
50대	26.2	31.8	38.2	45.9	53.2
60대 이상	25.1	33.7	46.7	29.8	36.0

세종시 사업 원안유지, 충남 전북은 야당에, 수도권과 경남은 한나라당에 유리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수정안, 즉 교육과학중심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원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수정안을 지지하는 응답비율이 과반수에 달함으로써 이번 5개 조사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이해당사자인 충남에서는 53.4%가 원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북의 경우에서도 원안을 지지하는 응답비율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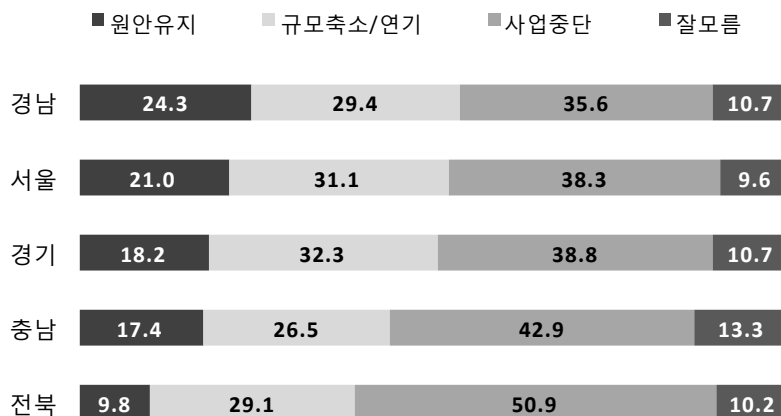
[그림10] 세종시 사업에 대한 5개 지역별 입장차이(%)



4대강 사업 :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도 사업 중단 여론 높아

4대강 사업은 이번 조사에 포함된 다른 이슈들보다 가장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개 조사대상 지역 모두에서 원안유지보다 규모축소나 연기 혹은 사업중단을 꼽은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림11] 4대강 사업에 대한 5개 지역별 입장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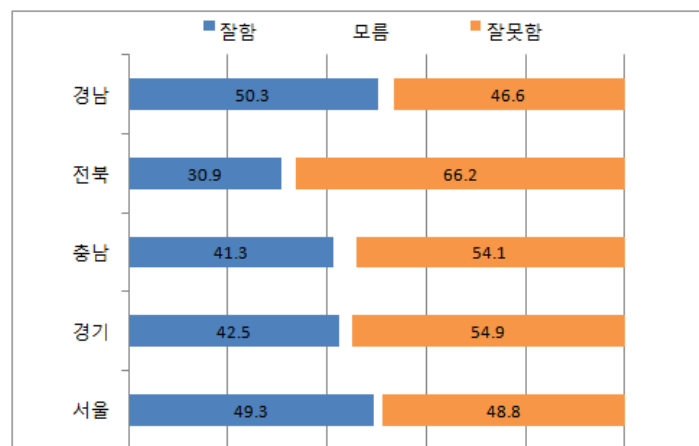


3. 기본 변수

1.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안정적 지지율에 따른 정권심판론의 한계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49.3%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경기에서는 42.5%의 지지율을 확보하였으며, 충남에서는 41.3%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전북에서는 30.9%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거부반응이 높은 호남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지지율을 거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남에서는 50.3%라는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감안할 때, 이 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한 국정실패 등을 이유로 하는 정권심판론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2] 지역별 이대통령 국정 평가(%)



한나라당 지지자와 보수층의 강한 국정운영 지지, 국정운영의 비판 계층의 낮은 투표참여의사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대통령지지도는 지지정당에 따라 분리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87.9%가 긍정적 평가를 한데 비해 민주당 지지층은 74.3%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지지정당에 따른 명확한 분열현상을 보였다.

또한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수층 64%, 중도층 48.4%, 진보층 26.5%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보수적 정치성향일수록 지지하는 반면 진보적 성향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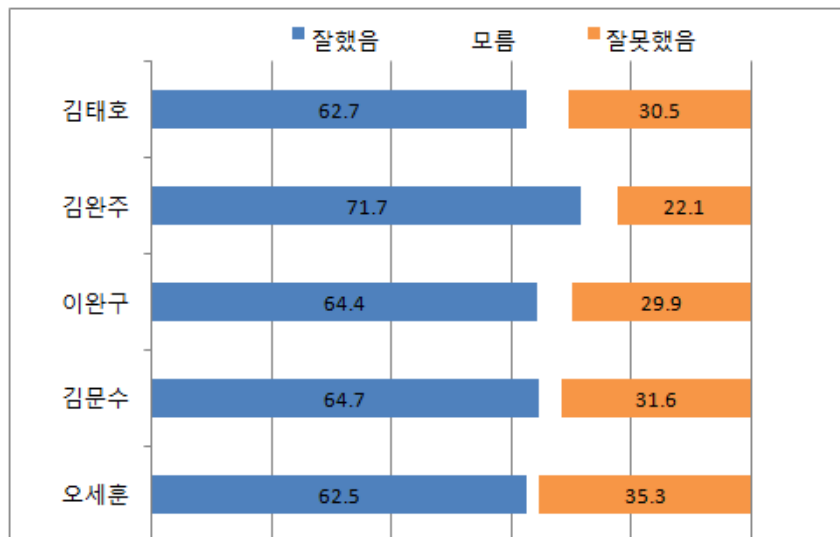
국정지지율과 투표의향과의 관계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53.6%가 지지하였지만, 기권층에서는 79.0%가 반대를 하고 있어 국정운영에 비판적일수록 투표참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높은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강한 투표의사를 가진 것으로 정리된다.

2. 지방현직자 평가

전반적으로 현직 광역단체장의 시/도정운영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회고적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현단체장에 대한 징벌적 투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은 62.5%의 지지율을 받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4.7%,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71.7%의 지지율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태호 경남도지사 또한 각각 64.4%와 62.7%의 지지율을 보였다.

단체장 지지율이 재선에 미치는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현단체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들의 투표의향이 높을수록 재선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시정평가와 투표의향 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62.1%가 지지하는 반면 반대는 36.1%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적극적 투표층의 63.4%가 지지를 한 반면, 기권의사층의 44.7%가 반대의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에서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일수록 김완주도지사에게 대한 지지도가 높은 반면에 기권의사층일수록 반대가 강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도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들 현직단체장들이 재선에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13] 지역별 현직 시/도지사 평가(%)



3. 정당지지율

지역별로 정당지지율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경기, 및 경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충남과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38.1%, 민주당 22.0%였고, 경기에서도 한나라당 34.3%, 민주당 24.1%로

차이가 있었으며,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38.7%, 민주당 12.5%로 26%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52.8%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민주당 24.6%, 자유선진당 21.0%, 한나라당 20.1%의 순으로 각축을 보였다.

무당파가 모든 지역에서 30% 전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선호변동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정당간 경쟁이 치열한 충남지역에서는 유권자의 1/4에 해당하는 무당파의 선호도가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표5] 지역별 정당 지지율(%)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무당파
서울	38.1	22.0	1.4	3.4	29.4
경기	34.3	24.1	1.3	3.5	29.5
충남	20.1	24.6	21.0	3.7	24.9
전북	5.7	52.8	0.4	5.1	30.8
경남	38.7	12.5	1.6	7.2	31.7

한편, 정당호감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은 서울과 경남에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은 경기, 충남, 전북에서 가장 높은 호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북지역을 제외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5점대이하로 전반적인 호감도는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정당지지율과 비교하면, 경기지역의 호감도가 주목되는데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높은 반면에 정당호감도는 민주당이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율과 호감도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는 충남지역에서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호감도를 받았다.

[표6] 지역별 정당 호감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서울	5.1	4.8	3.5	3.5
경기	4.8	5.1	3.9	4.0
충남	4.2	5.1	4.9	4.1
전북	3.5	6.3	3.7	4.4
경남	5.1	4.5	3.8	4.2

4. 경제투표

지방정부의 단체장 선거에 대한 경제투표 설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권자의 경제여건 판단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선거분석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투표양상에 주목하여 지역경제여건과 국가경제여건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그림14] 경제인식 (%)



먼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호전 또는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에,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유권자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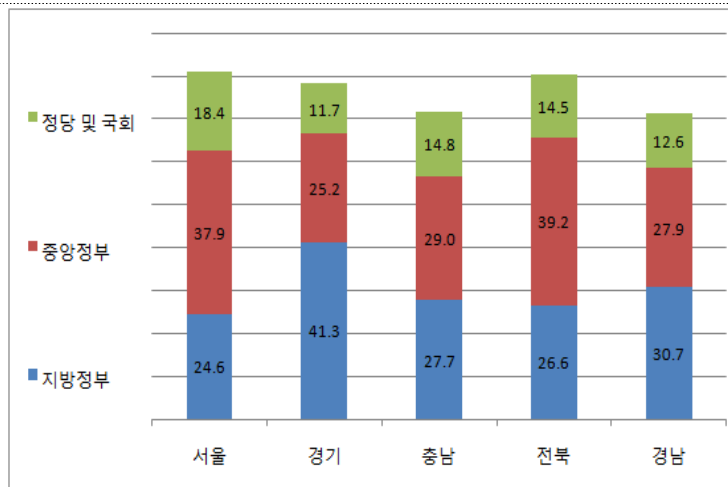


행태가 지역경제 혹은 국가경제 중 어느 쪽에 대한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여부에 의해 선거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만일 국가경제여건을 준거로 삼을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현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적 행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경제여건이 주된 준거기준이 될 경우에는 지역별로 서로 상이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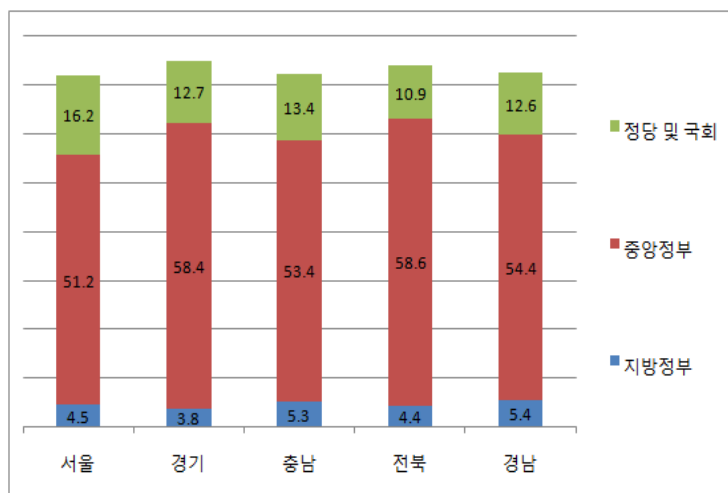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40.4%와 41.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남지역에서도 32.4%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그렇지만, 충남지역과 전북지역에서는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26.45와 24.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16%정도에 불과하여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인식이 징벌적 투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상대적 인식에서도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경제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상대적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전북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21.3%로 지역자체의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인식 16.3%보다 더 높게 나타나 지역격차에 대한 불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15] 경제상황 변화의 책임소재 (%)

지역경제 변화
책임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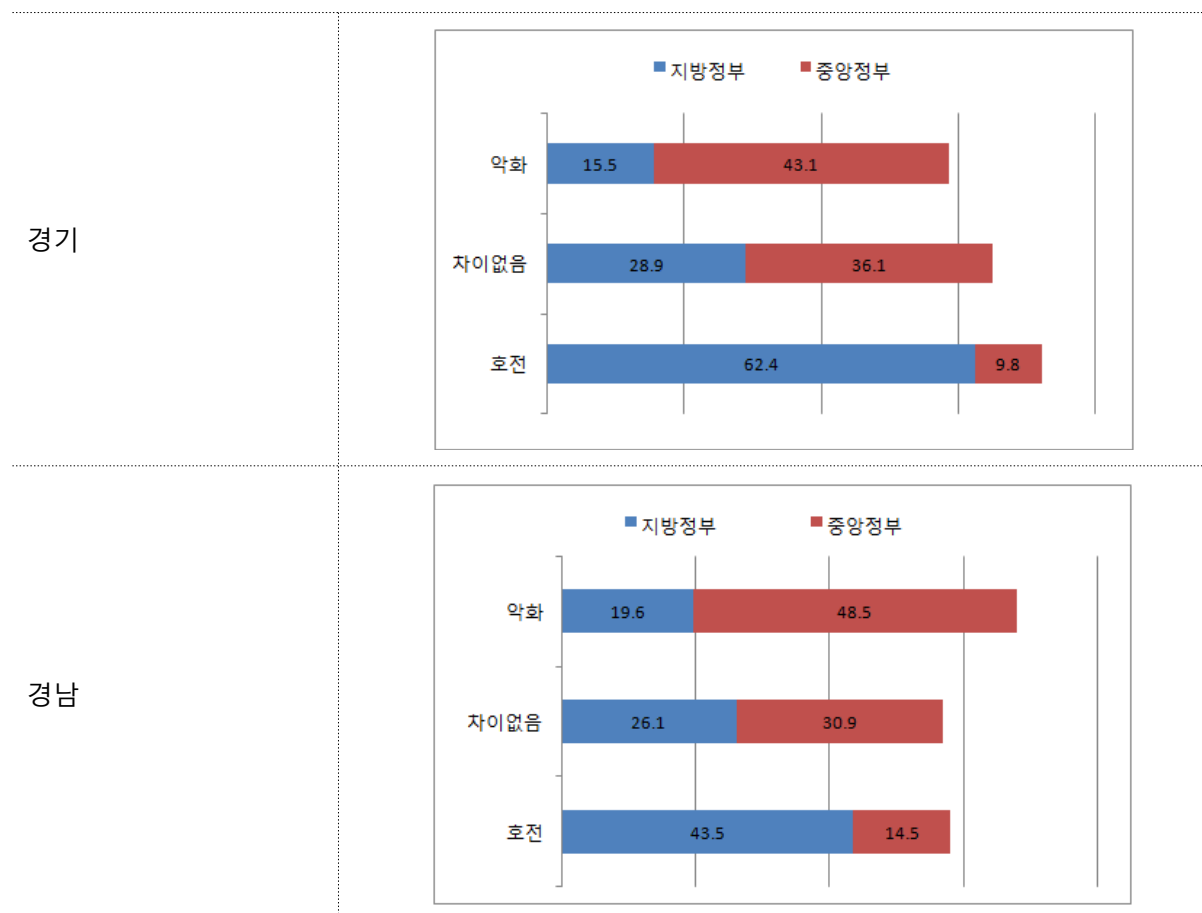
국가경제 변화
책임소재



그러나 이러한 경제 인식이 현 단체장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되어 투표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여건악화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장에 대한 평가로 직접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귀속 경향은 야당소속인 단체장에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여건에 대한 책임소재와 달리 지방경제여건에 대한 책임 인식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서울과 전북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인식이 각각 37.9%와 39.2%로 나타나 1/3이상이 중앙정부에 우선적인 책임소재를 두었지만, 경기지역과 경남지역에서는 각각 지방정부의 책임인식이 41.3%와 30.7%로 중앙정부의 책임인식 25.2%와 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남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평가가 다른 지역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에 책임을 귀인시키는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단체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16] 지역경제 상황 변화의 책임소재 (%)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지역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은 15.5%인데 비해 중앙정부 책임은 43.1%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때문이라는 인식은 62.4%였고 중앙정부 때문이라는 인식은 9.8%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지역경제 호전의 영향은 지방정부에게 악화의 영향은 중앙정부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현 단체장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경제투표의 가능성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경우에도, 지역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중앙정부 48.5%와 지방정부 19.6%로 나타난 반면에 호전의 책임은 지방정부에 43.5%, 중앙정부 14.5%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제 호전에 대한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대한 지지가 같은 정당소속인 한나라당 후보에게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AI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EAI는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정치권 · 학계 · 언론계에 적지 않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태도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선거 보도 및 선거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교의 연속성을 위해 2006년도 패널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방선거패널조사는 조사대상과 활용 목적에 따라 ① 5개 지역 패널조사(3회) ② 전국단위 패널조사 (2회)로 이원화 하여 진행한다.

① 5개 지역패널조사 : 서울/경기/경남/전북/충남 판세변화 및 선거결과 예측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의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각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전북/충남/경남 지역 유권자 대상의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서울과 충남은 2006년 조사를 진행했던 지역이며 경기, 전북, 경남지역이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조사지역에 포함되었다. 지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지역별로 600명을 구성하여 총 3회 반복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시	5월 10일~13일(4일간)		
모집단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총 3,000명(각 600명)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표본할당		
표집오차	95%신뢰수준 ± 4.1%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유지율	100%		

② 전국패널조사 : 중앙정치 및 차기 권력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주

전국단위 패널조사는 선거 전후 2회를 실시하여 지난 대선 후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와 현 정부 후반기 집권전략, 2012년 권력재편에 미칠 파장을 집중 탐색한다. 전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2007년 대선패널, 2008년 총선패널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1,200명 규모의 패널을 구성하여 이전 선거 이후 2회 유권자 태도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일시	5월 4일~6일(3일간)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1,200명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표본할당	
표집오차	95%신뢰수준 ± 2.8%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유지율	100%	



패널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정외과)

연구진

이내영 (연구팀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권혁용(고려대 정외과), 김성태(고려대 언론학부), 김민전(경희대 교양학부),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 유성진(이화여대 BK21), 이우진(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임성학(시립대 정외과), 지병근(조선대 정외과),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언론

신창운(중앙일보), 현경보(SBS)

조사연구팀

김춘석(한국리서치 수석연구부장), 임석빈 (한국리서치 과장)

이 보고서는 EAI 여론분석센터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